민주 "6월국회 열려면 대통령 사과부터"

대여 압박 강화… 내부 강온 기류 교차

한나라 "8일 개회 대화로 논의를"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이를 6월 국회 일정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거론하는 등 대여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단 임시국회를 개회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관련 책임자 문책 및 처벌, 국회 국정조사, '천신일 특검' 등 제반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조속한 해답을 제시해야 6월 국회가 진행될 수 있다"며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원내에서 해결할 사항이 많아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일정 부분 6월 임시국회 개회와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8일 국회 개회에 호락호락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구체적 대응 수위를 놓고는 내부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원내대표단은 일단 개회 자체에는 협조하되 이후 의사일정을 요구 조건과 연계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국회 개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강경파는 장외투쟁과 내각 총사퇴 요구 등 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 워크숍을 열어 6월 국회 대응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 개회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안,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이후 상견례 겸 첫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를 논의했으나 개회 시기·조건을 놓고 이견만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당면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하자며 '8일 임시국회 개회'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안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한승수 총리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장국 의장 자격으로 출장을 가게 돼 대정부질문을 그 기간에는 피해달라고 했다"며 '8일 개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6월 국회 개회 조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법무장관·검찰총장 등 책임자 사퇴, 특검 및 국조 수용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양당의 첨예한 입장차로 미디어 입법과 비정규직법 개정 등을 다룰 6월 임시국회는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은 혼돈 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일 취임인사차 서울 여의동 한나라당사를 방문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쇄신 후 靑·내각 쇄신을"

한나라 소장파·친이·민본21 등 공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한나라당에 대한 쇄신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4·29 재보선 패배로 시작한 쇄신작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여당에 대한 민심의 반감이 더욱 거세지면서 쇄신의 다급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민심의 요구는 당·정·청 전면 쇄신이겠지만 이를 위해 당부터 선제적으로 쇄신하자는 것이 1일 현재 한나라당 내부의 분위기다.

당 관계자들은 "계파 이해관계를 떠나 당부터 먼저 변화를 이뤄내고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하자"는 생각이 꿈틀대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의 이상 동향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당 면모부터 일신함으로써 이 같은 민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선(先) 당쇄신, 후(後) 청와대·내각 쇄신' 구상인 셈이다.

쇄신특위 위원장인 원희룡 의원과 정두언, 남경필, 권영세 의원이 지난달 29일 박희태 대표를 면담한 게 이런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이들은 면담에서 당쇄신을 위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쇄신특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당 지도부 사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건의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김선동 특위 대변인은 특히 "당 지도부 사퇴 문제와 관련해 쇄신위원 대부분이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쇄신특위는 지도부 사퇴 범위와 관련해선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당 쇄신론은 소장파뿐만 아니라 친이(친 이명박) 직계, 민본 21, 이재오계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당 쇄신론의 1차 분수령은 4일로 예정된 의원연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찬회에서 쇄신특위가 당 쇄신론을 공식 제기하면서 조기 전대, 대표대행 체제 여부 등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게 당 쇄신론자들의 주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떠나간 분의 뜻 잘 받들어 새롭게 출발하자"

李대통령 盧 서거 언급

이명박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면서 "이제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밝은 미래를 행해 새롭게 출발하자"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일 라디오 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지난주 우리는 너무나 뜻밖의 슬픈 일을 당했다"며 "경복궁 앞뜰 영결식장에서 고인의 영정과 슬픔에 젖은 유족들을 마주하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며 함께 애도해주시고, 국민장을 잘 치르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이제 우리 모두 슬픔을 딛고 떠나간 분의 뜻을 잘 받들어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열 개 나라로 이뤄진 아세안은 우리에게 교역 대상으로는 세 번째, 투자 대상으로는 두 번째로 큰 지역이며 2015년까지 EU처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된다"며 이번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공수처 신설 재추진

〈공직자부패수사처〉

'盧 정책유산' 계승 시동

민주당은 1일 '노무현 정신 계승 작업'의 일환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일부 정책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계승 정책은 공무원사회개혁을 위한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수처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정책으로, 기소독점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검찰과 한나라당의 반발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사망 이후 검찰 제도개혁에 대한 여론이 다시 고조됐다는 판단 아래 다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검찰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선 상설특검이나 공수처 신설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양극화 해소 및 서민지원 관련 정책도 중점을 둬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단 6월 임시국회의 최우선과제를 '서민관련법 통과'로 정하고 이르면 4일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서민관련법 7~10개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뉴민주당 플랜에도 '국가비전 2030' 등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정책과제와 그 정신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민주연대 우원식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 시절 끊임없이 추진됐던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MB 악법'을 막는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라며 "특히 미디어법 개악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사무총장 장광근 의원 임명

한나라당 사무총장에 3선의 장광근 의원이 1일 임명됐다.

경기 양평 출신인 장 신임 사무총장은 당 수석부대변인과 16대 총선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거쳐 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 사무총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당이 요구하는 목표점, 국민이 당에 기대하는 지향점을 한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사무총장으로서 잘 균형추를 잡고 당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에 이재오 전 의원의 핵심 측근인 재선의 진수희 의원을, 전당대회 의장을 겸하는 전국위 의장에 '친박'(친박근혜)계인 4선의 이해봉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 장 용 지 급 매
◦위 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목장용지 : 6,390㎡(1,933평) ◦임 야 : 4,955㎡(1,499평)
◦대 지 : 476㎡(144평) ◦도 로 : 522㎡(158평)
◦총 계 : 3,734평
◦건 평 : 2,350㎡(약700평)견사, 돈사, 주택(104㎡) 버섯재배사등 관리지역으로 필지는 여러 필지이나 한곳에 붙어있음
◦매도가 : 1억7천만원 (은행대출 1억 포함)
연 락 처 ☎010-3617-8810

= 합격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학원!, 無等과 만나세요!! =
7·9級 공무원 全직렬
30 40 늦깍이 주부반모집 상한폐지 행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향후 5년간 소방인력 8395명을 충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시험일: 국)9급, 매년 4월 / 7급,7월 시행 지)9급, 매년 5월 / 7급,9월 시행 ※서울 7.9급 행정직 매년 7월 시행
• 채용인원: 7.9급국가직3-4천명, 지방직4-5천명
= 대한민국 공시합격의 선구자 無等!! =
개 강 6월 1일 (주·야 공통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법, 공중보건학, 상식,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부대시설◦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SINCE 1965 학원설립인가
44년 전통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제20회시험 10월 25일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배출 【광주지역 3,200여명 1회~19회까지】
여성 최고의 전문직 아파트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大개강 6월1일 (첫진도 시작반)
국비지원 선착순 직장인을 위한 수강료 환급과정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순경 공채
개강 매월 초(합격시스템)
경 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6개월과정 광주지역 서재형, 오경수 합격
6개월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25(%)D/C 교재15(%)D/C
1년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합격배출 1위 교수진
경찰학 오탄 • 신 경향 경찰학 개론 직강 • 남부 경찰학원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수사 차주윤 • 강의경력 22년 • 광주 순천 메인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영어 이방희 • 경찰 영어 70% 합격좌우 • 꼭꼭 찍어 쉽게 강의 • 강의경력 15년
형법 허문표 • FIRST최강 형법 직강 • 노량진 한국경찰 전임 • 광주 메가 학원 전임
형소법 김헌중 • 사시 1차 3회 합격 • 신림동 법원 경찰수강대상 10년 강의 • 형소법출제경향이 확 바뀌고있다.
주저하지말고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경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www.gmega.co.kr ☎226-5050